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018. 01. 18

목 차

- I. 추진 여건
- II.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 III.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IV.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I. 추진 여건

1. 보건복지 분야의 성과

현 정부 출범 100일 전후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
핵심 국정과제 집중 발표·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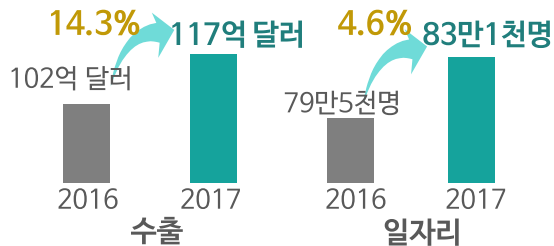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로드맵 ('17.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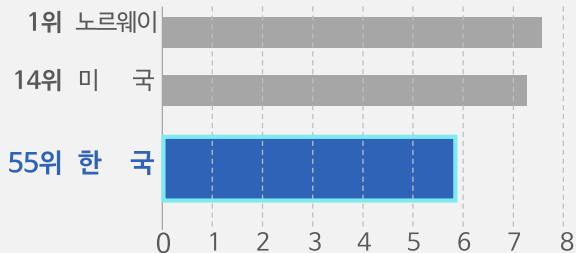
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
('17.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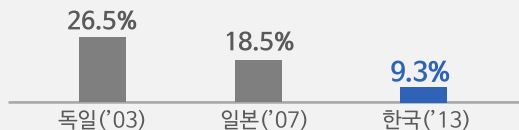
2. 아직 부족한 점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 필요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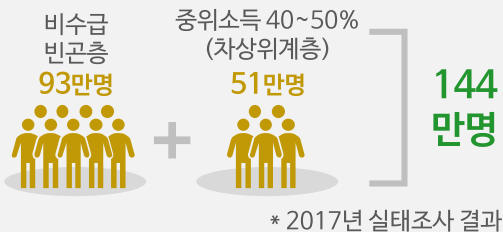


〈공공사회 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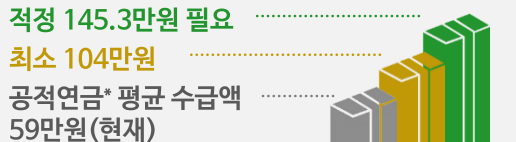


※ 독일은 '03년에, 일본은 '07년에 국민소득 3만불 달성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빈곤층도 상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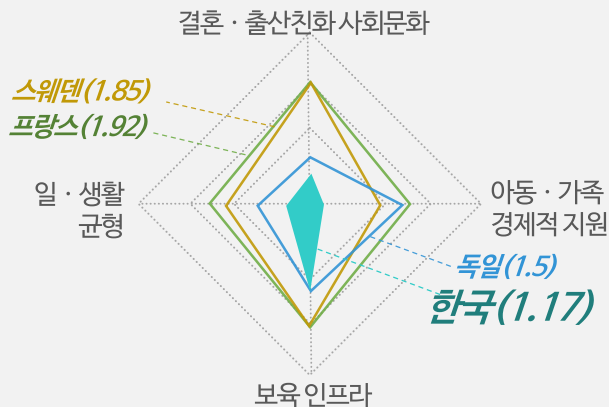
적정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한 공적연금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

일·생활 균형, 아동·가족에 대한
재정지출은 부족

보육지원 위주의 가족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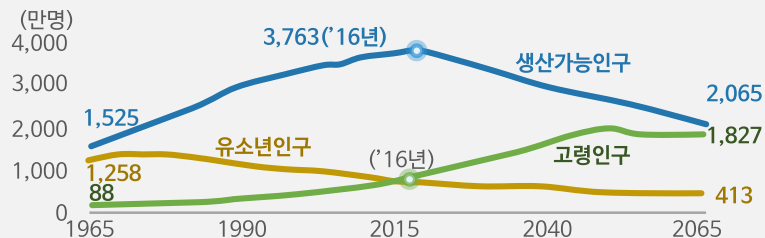
※ 저출산 대책 예산 중 보육 비중: 한국 67%, 프랑스 40%, 스웨덴 53%

3. 앞으로의 사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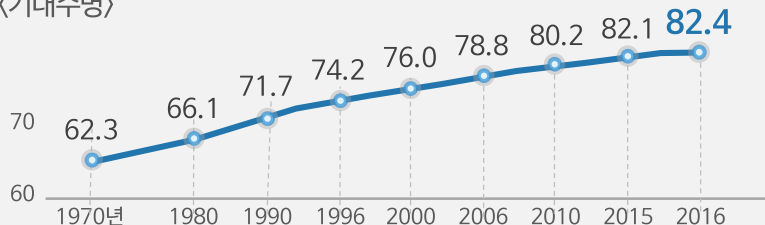
인구 변화

인구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적정한 수준 설정, 질적 변화 불가피

〈인구변화〉



〈기대수명〉



생애주기별 근로형태의 변화

지금까지 평생직장

교육, 직업훈련 → 취업 → 실업/가사 → 재취업 → 은퇴

건강한
고령인구 증가

빨라지는
기술변화

플랫폼 중심의
개인일자리

앞으로 평생고용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 훈련 ↔ 취업',
'취업 ↔ 실업' 등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

4. 3만불 시대, 사회안전망 혁신 필요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연령

건강이 좋지 않아서

19.2% 50.2세

가족을 돌보기 위해

15.5% 39.6세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31.0% 50.7세

정년퇴직

8.0% 58.1세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고령층 부가조사

경력단절
전·후 임금

月173.1만원



경력단절 前

月146.3만원



재취업

경력단절
여부에 따른
임금

月241.8만원



경력단절 경험 없음

月166.6만원



있음

*2016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변화가 필수적

5. 포용적 복지국가의 모습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지금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경제보다 후순위로서 복지)



앞으로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사람 중심의 사회안전망 (경제=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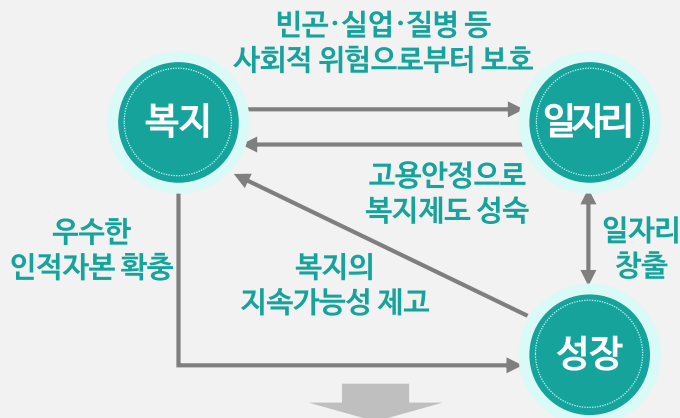
포용적 복지국가의 모습

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OECD)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



포용적 복지국가

=

포용적 성장국가

6.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A

- 교육 ➡ 취업 : 보육, 아동건강투자, 아동수당, 초·중등 교육, 교육-고용연계
- 고용 ➡ 교육 : 직업훈련

B

- 이직, 창업 등 : 직업훈련,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지원, 고령자창업지원, 의료보장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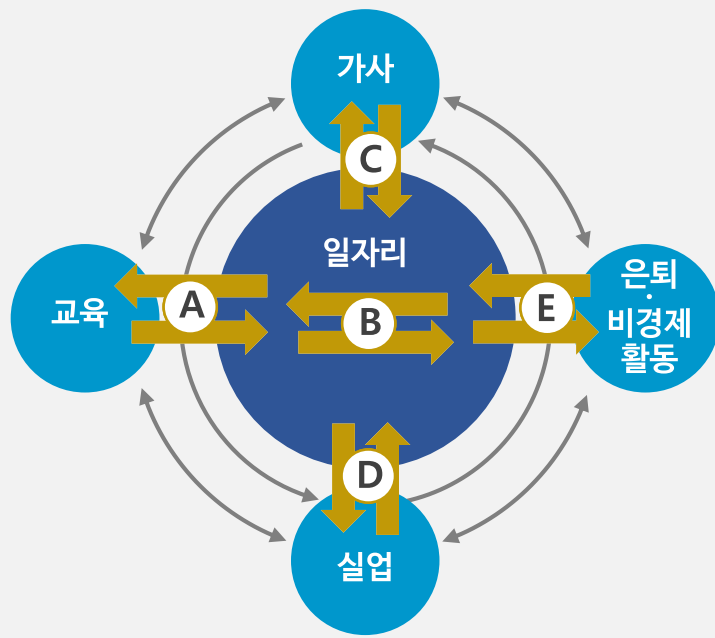
- 고용 ➡ 가사 :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휴직, 양육 지원
- 가사 ➡ 취업 : 보육, 장기요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경력단절 여성지원

D

- 고용 ➡ 실업 : 실업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 실업 ➡ 취업 : 직업훈련 교육, 중고령자 취업지원, 자활지원, 의료보장

E

- 고용 ➡ 은퇴, 비경제활동 :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장기요양서비스, 여가·문화, 평생교육
- 은퇴, 비경제활동 ➡ 취업 : 고령자 고용, 노인·장애인일자리, 의료보장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마련 필요

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1.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교육

A

일자리

국정과제 48

아동수당 신규 도입

-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소득하위 90% 이하 약 238만명, 9월)

- 대상자 수, 소득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6월부터 신청 준비

국정과제 44

국가예방접종 강화

*인플루엔자

59개월
이하

60개월 이상
초등학생 확대

*중·고등학생 등

단계적 확대

2018. 10월~

현재

국정과제 48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전국 확대(3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조사,
사례관리

피해아동
보호

자료 연계

고위험가구
예측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사례관리

방문확인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 응급보호

• 상담·치료 등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상담·치료 등

• 교육 및 정서지원

2.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국정과제 42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0월)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추가 보호 (연간 10만명)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화

[생계·의료급여를 못 받은 빈곤층
93만명(15) ➡ 47만명 이하(22)]

적정보장을 위해 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등 개선

*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가구는 94만명 추정

국정과제 42

자립지원 강화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생계급여 수급 청년 (15~34세)

월 40만원 지원



3년 후



1천5백만원

자활급여 인상(8.2%), 자활일자리 1,500개 추가 ('17년 45천 ➡ '18년 46.5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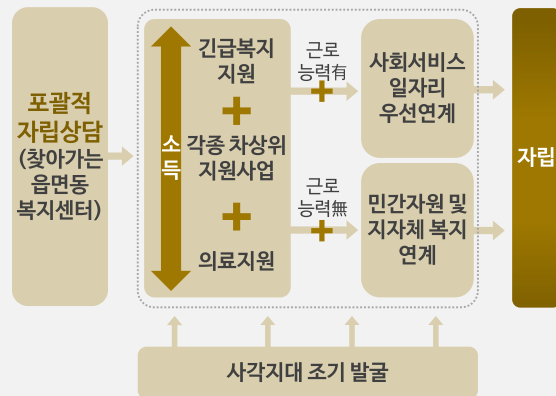
기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공제 확대 (보험료의 50% ➡ 75%, 1월)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육성 등과 연계

국정과제 42

빈곤 사전예방체계 구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체계화를 위한 통합지원업무 지침 마련 (17개 부처의 87개 사업, 하반기)



3. 편안한 노후를 지원

일자리

E

은퇴
비경제
활동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정과제 43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9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10월)

- ▶ 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 75만명가입

노인돌봄

국정과제 43

치매국가 책임제, 장기요양 서비스

- ▶ 치매진단 MRI 건강보험 적용(1월)
- ▶ 경증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1월)
- ▶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사례관리 체계화



노인
일자리

국정과제 43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역량제고 프로그램 강화

- ▶ 노인일자리 확대('17년 46.7만명 → '18년 51.0만명)
- ▶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등 민간시장 고령자 고용 촉진
- ▶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유형 도입

존엄한
죽음

국정과제 45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행(2월)에 만전
- ▶ 호스피스 시범사업(가정형 등)을 확대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18.3개소) 등 추진기반 강화

4.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

'22년까지 34만개 창출

국정과제 17

- ❖ 국민체감,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예시 : 중독통합관리사)
- ❖ 복지시설 종사자 연가 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근무여건 개선(예: 2교대 → 3교대)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

스마트 헬스케어

'22년까지 10만개 창출

국정과제 34

- | | |
|---|---|
| ❖ 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8~'20) | ❖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체계 구축방안 마련(6월) |
| ❖ 연구중심병원 R&D ('18년 300억원)
보건산업 혁신창업 지원센터 운영(2월)·펀드(6월) 신설
→ 5년 간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1천개 | ❖ 로봇,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시범사업(하반기) |
| | ❖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신설(7월, 중국)
→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 지원 |

Ⅲ.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1.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

국정과제 48

보육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연간 450개소) ➡ '22년 공공보육이 40%를 차지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 매입 활성화 등 확충방식 다양화
- 신축 지원단가를 인상(4.2억 ➡ 7.84억원), 지자체 보조율 차등화 등 균형 배치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를 9.6% 인상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1월)

-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반기)



아동 돌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10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실시(3월)
- 지자체 중심의 지역돌봄협의체 구축방안 마련(보건복지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 협업)

국정과제 48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기존 인프라 구축 등 보육지원 중심

패러다임
전환

일·생활 균형,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



2. 장애인 권익 신장

일자리

E

은퇴
비경제
활동

국정과제 42

장애 등급제 폐지('19.7월)

맞춤형서비스제공

- ▶ 일상생활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 고려한
종합판정도구 개발(6월)
- ▶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 정비(12월)
-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실행 방안 마련(6월)
47개 관계법령 정비(12월)



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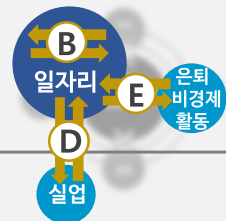
장애인 건강증진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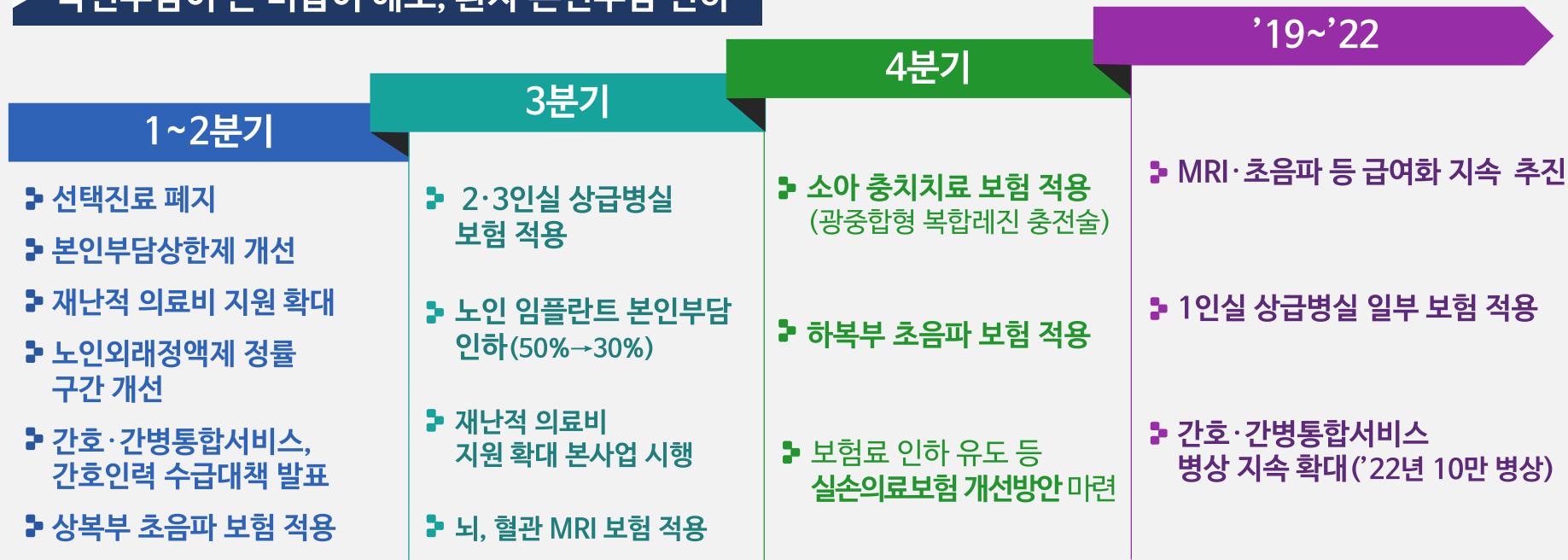
- ▶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
→ **합병증, 만성질환 관리**
- ▶ 건강검진기관(10개소) 지정
→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22년 60%)
-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건강관리, 진료, 재활,
임신·출산 지원**(’21년까지 시·도 별로 확충)
- ▶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건강관리
의사 도입, 재활 수가 개선 등**
* (건립 착수) ’18년 1개소, ’19년 4개소, ’20년 4개소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44



▶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 해소, 환자 본인부담 인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9월), 시행('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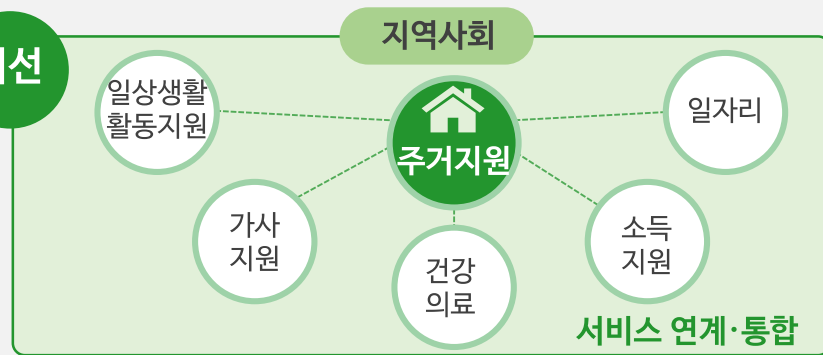
IV.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1. 사람 중심 보건복지정책

기존



개선



시설에 격리

획일적 서비스

인권 침해

대상자별 분절적 서비스

시설 밖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생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개인의 욕구, 수요를 존중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 통합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정책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지원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커뮤니티 케어)



장애인 탈시설화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 마련(11월)
-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19~)
- 자립정착금 지원 방안 검토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모형 개발
→ 사회복귀 지원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 강화
- 절차보조인·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의사결정 지원으로 자립 강화



아동 지원 확대

- 시설보호 위주에서 **지역사회·가정보호** 중심으로 개편방안 마련('18)
*아동복지시설 기능 개편, 입양체계 개편
- 심야 등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18)
- 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사례관리, 주거, 일자리 지원 등)



노인 의료·요양·치매

- 욕구, 신체상태, 돌봄 여건 등 고려



-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 가족지원, 서비스 연계 등 지원
-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로드맵 마련(상반기)

3.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건강 관리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18년)

현행	개선모형
• 금연 등 건강증진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 모자보건사업 • 의료비지원사업	• 영유아,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모형 개발 • 맞춤형 건강상담·지원 및 방문서비스 제공·연계·협력

▶ 보건소를 통한 통합적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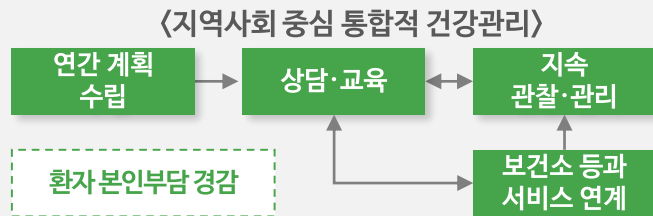


- 제공 : 신청사업 중심 → 맞춤형 플랜
- 대상 : 보건소 방문자 중심 → 찾아가는 서비스
- 연계 : 분절적 서비스 → 복지연계서비스

만성 질환

동네의원 중심 관리체계 구축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상반기)·확산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6~)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14~)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07~)



4.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기반 조성

국민 체감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전담인력 확충

❖ 통합 사례관리·방문건강관리 강화

❖ 전담 공무원 확충

• 사회복지 : 1.2만명 (~'22년)

• 방문간호 : 3.5천명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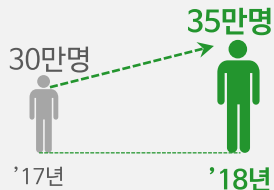
* 아동복지 200여명, 치매전담 500여명

❖ 정신건강복지센터(1.5천명) 등
서비스지원 인력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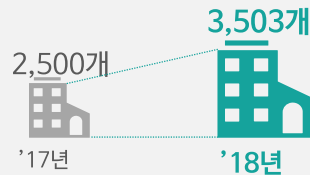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보를
적극 활용

❖ 실직, 질병, 빈곤 등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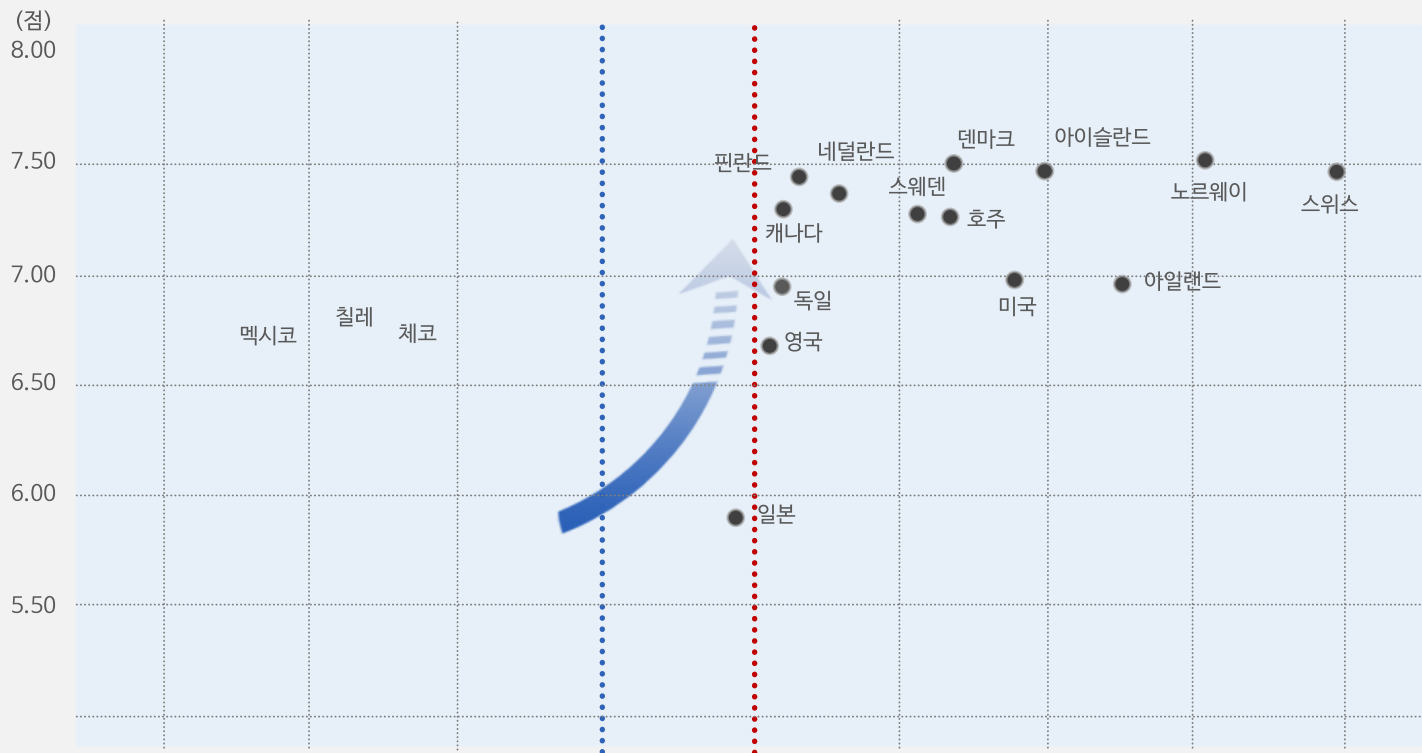
❖ 전국 읍면동 확대



❖ 주민센터·보건소·사회복지관 등
공공·민간복지자원 연계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4만불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행복지수
(’14~’16)



1인당 GDP('16)